

2022
8. 16

KRIHS POLICY BRIEF
No. 878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지역개발사업 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주요 내용

- 1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
- 2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 3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 4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정책제안

- 1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포괄보조방식과 사업선택권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제도 도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참여 유도
- 2 (지역개발분야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탄력적 운용, 지역개발사업 예산과 지방재정 관리제도 간 연계 강화, 재정사업의 집행과정 평가 강화 및 예산과정에 평가결과 반영 확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협력적 사후관리 강화 필요

정우성 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재정분권 강화정책 증가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통해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의 첫발을 내딛었으나,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수도권 중심의 권력집중에 따른 제도와 관행이 고착되어 지방분권은 지지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당시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 기조로 삼고,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여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고보조금 정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지방재정 규모 확대와 지방예산편성 지침의 폐지 및 보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재정분권 확대 논의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확대에 목적

-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결정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 권한과 기능의 이양을 의미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이 매우 낮다는 문제인식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충을 통해 재정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재정분권의 실현 논리

지역개발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필요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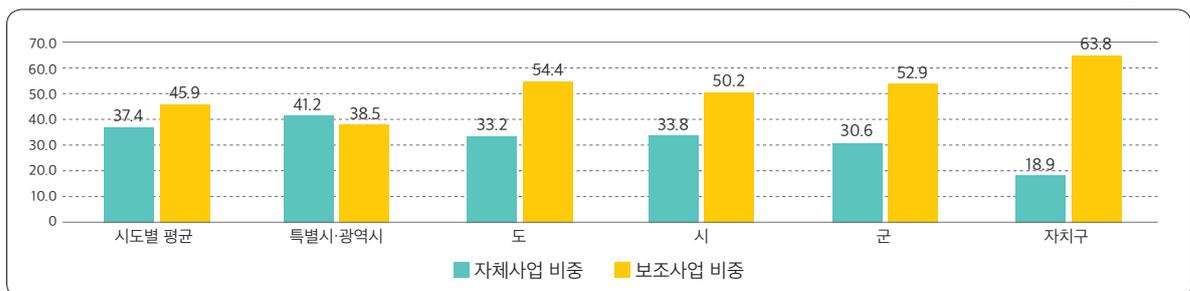
지역개발사업은 특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원을 분배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하는 영역이며 특히 공모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해 중앙정부 재정의존성을 더욱 심화

지방재정여건이 양호한 특·광역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비중이 높지만 도나 기초지자체는 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상황

- 2022년 기준 자치단체 총예산 약 288.3조 원 중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정책사업 예산은 83.3% 수준인 약 240.1조 원 수준
- 이 중 자체사업(전국 평균 37.4%)에 비해 보조사업 비중(45.9%)은 8.5%p 높은 수준
- 광역보다는 기초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시지역보다 군지역과 자치구의 보조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그림 1 지자체 유형별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비중 비교

(단위: %)



- 주: 1) 산정기준: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은 순계예산규모, 자치단체별 평균은 총계예산규모, 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세출기준
 2) 정책사업: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3) 자체사업: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정책사업 중 보조사업 제외)
 4) 보조사업: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제외)
 5) 대상회계: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출처: 지방재정365(<https://ofin.mois.go.kr>)

2

재정분권 현황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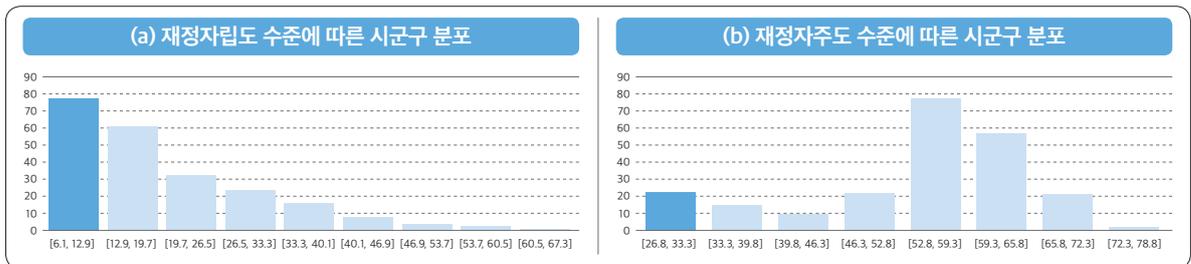
재정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은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과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5 : 25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국세비중이 높으며, 세출은 중앙 대 지방(지방교육 포함)이 대략 40 : 60 수준으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가 큰 상황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차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에 크게 의존한 나머지 지방교부세나 지방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¹⁾나 재정력지수 등은 하락하거나 정체

- 2020년 기준 각 시군구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재정자주도는 50% 이상인 지역의 비중이 더 높아 교부세 등 이전재원이 지역 간 재정격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분석

그림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수준별 시군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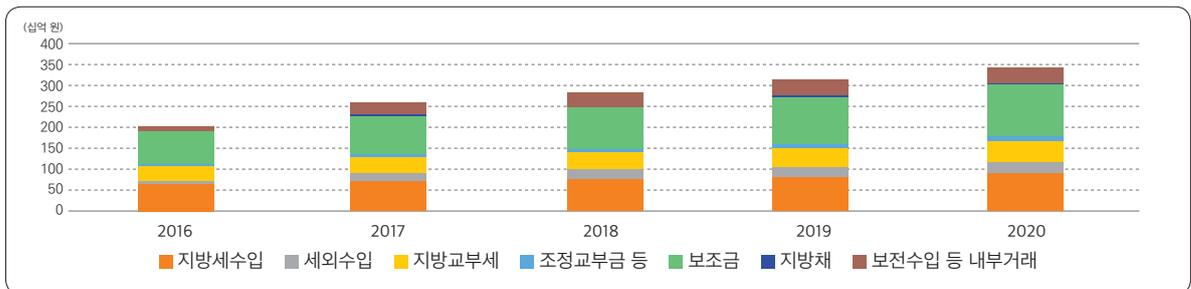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시군구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전반적인 예산 차원에서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

- 국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율은 2019년 현재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54.5 : 34.8 : 10.7(중앙정부 : 자치단체 : 지방교육), 총 재정사용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38.5 : 46.4 : 15.1(중앙정부 : 자치단체 : 지방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비중은 증가했으나 세입비중이 감소하여 중앙정부 의존 경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2020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순계는 총 345조 원 중 보조금 비중이 36%인 약 124조 원으로 세입원 중 가장 높은데, 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방증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세입 순계 예산 규모 추이('16~'20)



출처: 행정안전부(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편성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을 지표에 포함함.

재정여건의 지역 간 편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열악하면서도 지역 간 편차가 큰 편

- 우리나라 지방재정자립도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 예산기준으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6%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상당
- 2021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특·광역시 50.7%, 도 30.9%, 시 24.8%, 군 11.2%, 자치구 23.4%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큰 상황
- 2021년 기준 군지역 전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치구 역시 69개 지역 중 66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미달하는 상황으로 평균적으로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군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

표 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립도 비교(2021)

구분	합계	시·도	시	군	자치구	비중(%)
합계	243	17	75	82	69	100.0
10% 미만	50	-	3	46	1	20.6
10~20% 미만	96	-	31	30	35	39.5
20~30% 미만	49	5	19	5	20	20.2
30~40% 미만	26	4	15	1	6	10.7
40~50% 미만	13	4	5	-	4	5.3
50% 이상	9	4	2	-	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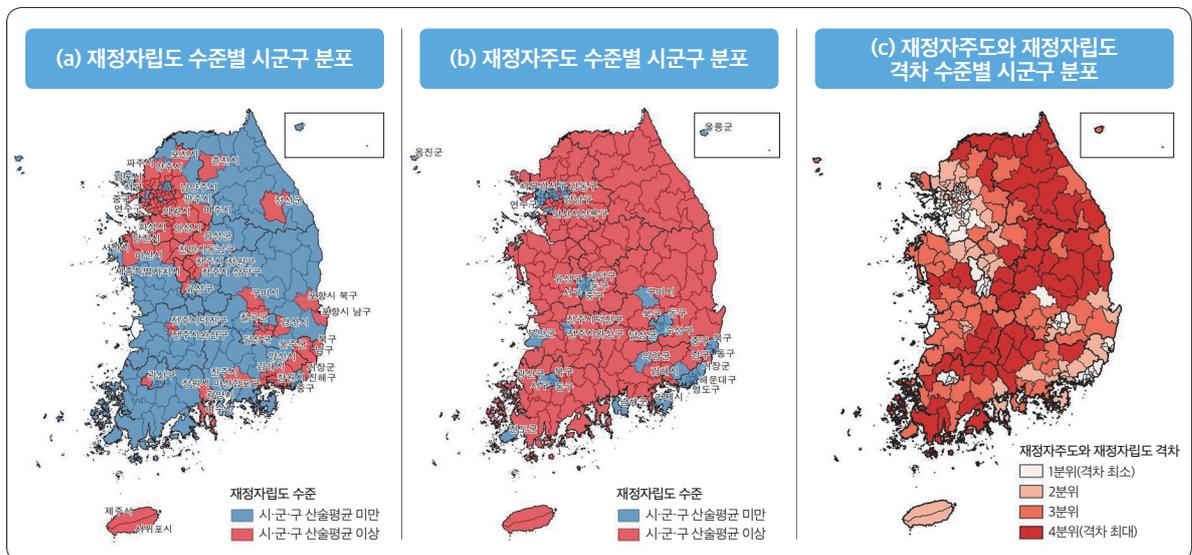
주: 1) 재정자립도=(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2014년 세입과목 개편(인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이 세외수입에서 제외)으로 본 표는 세입과목 개편 후 자료를 기준으로 함.

2) 산정기준: 일반회계, 당초 예산(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 기준, 자치단체: 총계 기준)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921&conn_path=I2 (2022년 8월 10일 검색).

-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가 20% 미만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일부 역시 시군구 세원의 불균등한 분포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비교적 큰 격차
- 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분석했을 때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및 특·광역시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 분석결과와 대비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전국평균 약 23.5%p 수준으로 나타나며 더 큰 격차가 나타나는 곳은 주로 자체 자원 확보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 도의 군지역

그림 4 재정자립도·재정자립도 수준별 시군구 분포(2020년 기준)



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산출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당 값의 크기와 비교하여 시군구의 상대적 재정 수준을 분석.

출처: 통계청 시군구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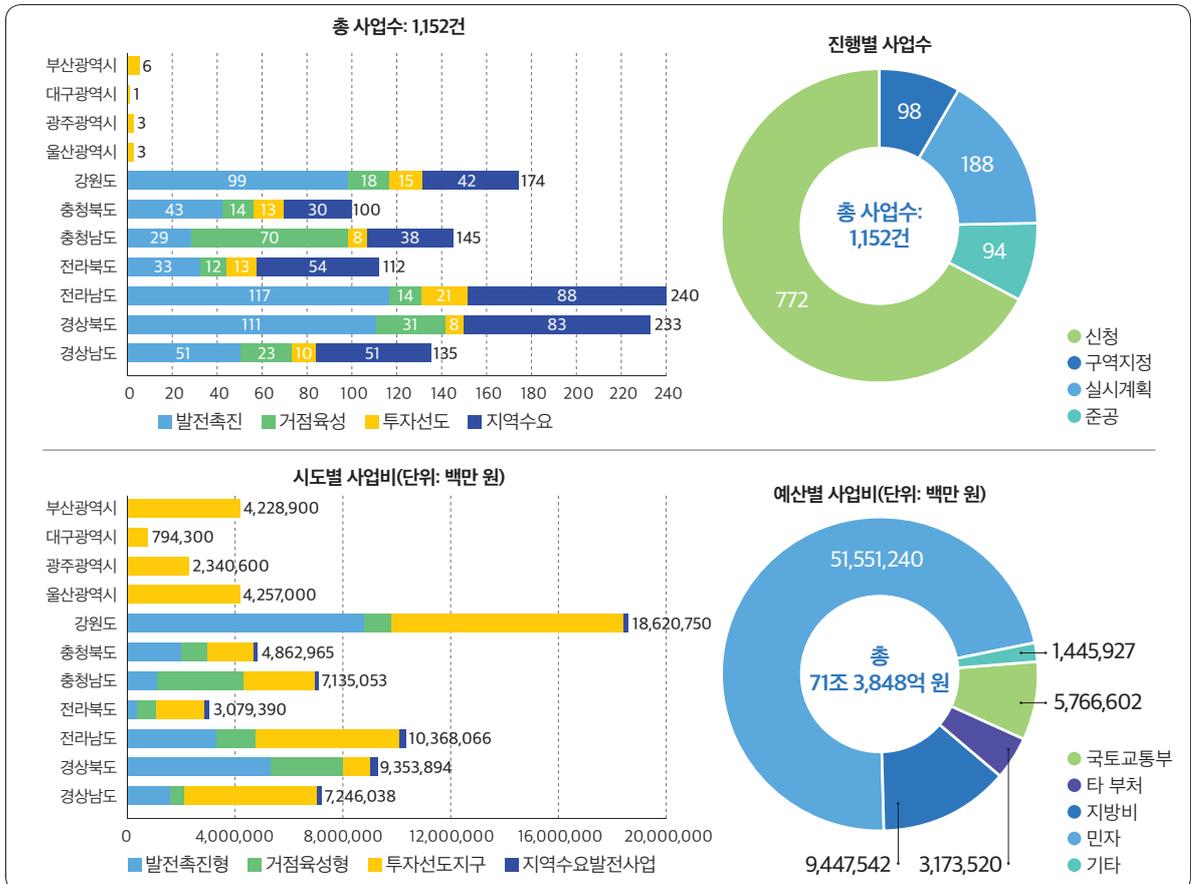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의 재정분권 현황

지역개발사업의 높은 중앙정부 재원의존도

지역개발사업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자율성에 제한

- 2021년 현재 지역개발계획상 발굴된 사업은 총 1,152건으로, 전남 240건, 경북 233건, 강원 174건, 충남 145건, 경남 135건, 전북 112건, 충북 100건 순
 - 이 중 사업이 진행된 곳은 380여 곳으로 전체의 32.9% 수준(준공 94건, 실시계획 188건, 구역지정 98건)
 - 특히, 투자선도지구는 2015년부터 총 18곳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이 중 지구지정은 11곳²⁾
- 지역개발계획(「지역개발지원법」)상 사업들을 살펴보면, 민자로 조달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나 그 외의 사업비는 국비 대 지방비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
- 전체 예상 사업비 규모를 보면 71조 3,848억 원 중 민자가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는 약 8조 9,401억 원(12.5%), 지방비는 약 9조 4,475억 원(13.2%) 수준으로 지역개발사업 대부분은 민간투자 유치가 관건임을 시사
 - 전체 예상 사업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5%이며, 기반시설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8.1%를 차지

그림 5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수준별 시군구 분포(2020년 기준)



출처: <http://rdims.lh.or.kr> 내부자료 (2021년 5월 6일 검색).

2) ① 순창 한국전통발효산업단지(16), ② 남원주 역세권개발(16), ③ 울주 에너지융합일일산업단지(16), ④ 영동 레인보우힐링타운(18), ⑤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18), ⑥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19), ⑦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19), ⑧ 함평 축산특화단지(20), ⑨ 청주 오송화장품단지(20), ⑩ 춘천 수월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21), ⑪ 광주 송정역KTX경제거점형(21)

4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

지방의 자율 재정여건과 지역개발사업 특성: 충청남도 사례 중심

충청남도 지역개발사업 분석결과 자율적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비중이 높고 시도예외의 재정적존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사업의 자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룹3(재정기반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체사업 중 국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보조사업에서는 국비의 비중이 낮고 시도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표 2 재정여건별 사업유형에 따른 개발사업 재원조달 비중 비교

(단위: %)

구분	자체사업			보조사업		
	국비	시도비	시군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그룹 1(재정자립도 평균 이상, 재정자주도 평균 이상)	2.3	0.2	97.6	2.3	0.2	97.6
그룹 2(재정자립도 평균 이하, 재정자주도 평균 이상)	2.8	1.4	95.8	2.8	1.4	95.8
그룹 3(재정자주도 평균 이하)	1.2	4.1	94.8	1.2	4.1	94.8

출처: 통계청 시군구 재정자립도, 시군구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분석.

- 충청남도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간 격차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 관련 지표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격차와 자체사업 수의 비중은 음(-)의 상관관계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격차와 지역개발 사업비 중 시도비 비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중앙정부 못지 않게 시군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도의 재정조정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격차가 커질수록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에서 시군구비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정부주도 사업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자율성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음을 시사

표 3 시군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격차와 사업수 및 재원조달 비중 간 상관관계 비교(충청남도)

구분	사업수	자체사업		
		국비	시도비	시군비
상관계수	-0.07401	-0.09708	0.285863	-0.16418

구분	상관계수	보조사업		
		국비	시도비	시군비
		-0.25228	0.235509	0.071938

출처: 통계청 시군구 재정자립도, 시군구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취약

지역개발사업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와 자율편성 계정 및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 시범사업 도입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³⁾ 지역개발사업의 분권화 수준이 여전히 낮으며, 국고보조금사업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

- 전문가들은 국고보조금사업의 급증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매칭펀드 형태의 사업으로 인해 지방비 비중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지방재정 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제기

3) 전문가 인터뷰 조사는 지역정책 및 지역개발사업 연구경험이 있는 교수, 지역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2주간 진행되었으며, 서면자문 등의 형태로 17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쟁점 사항을 도출.

- 또 지역의 각종 세제/규제권한 제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지역개발사업에서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재정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재정분권은 과세권과 지출권한의 이양보다는 보조금과 세입 교부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분권이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으로 세원이 집중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재정분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방재정 관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모두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관련된 주요 쟁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표 4> 참조)

표 4 지역개발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주요 쟁점

구분		주요 쟁점사항
재정 자율성	재원 조달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정책이 산업유치와 인프라조성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효과는 사업을 유치하는 시군구에 집중되어 발생 • 재정분권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켜 낙후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세수기반이나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므로 재정분권은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 지역 수요와 괴리된 매칭을 전제로 한 공모 중심의 사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금 사업의 급증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매칭되는 지방비 증가 - 특히, 국고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경우 매칭펀드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왜곡된 자원배분을 초래 - 중앙주도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선정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공모하게 되는 문제 발생
	재원 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부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구조도 없는 상황이고, 협의구조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정당구조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제한적 • 국고보조방식의 사업방식 관행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역량(기획 능력, 예산 등) 제고에 어려움
재정 책임성	재원 조달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 선호하는 개발사업과 산업분야가 한정적이므로 특정사업이나 분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역 간 중복이나 불균형 문제를 야기 • 시설건립과 관련된 공모사업의 경우, 시설건립 예산은 일정 비율 국비로 추진되는데, 건립 이후의 관리·운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
	재원 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배분, 지역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순위에 대한 원칙이 우선적으로 필요 • 지역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지역개발사업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기관이 필요 • 지역개발사업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중심체계로의 전환. 또한, 대부분의 보조금 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은 운영관리가 매우 미흡하므로,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를 평가하고 이를 피드백할 수 있는 평가반영체계의 마련·시행이 필요 • 지역개발사업의 세출분권이 확대될 경우, 방만하고 무리한 사업시행으로 재정악화와 불필요한 투자사업 증가로 재정부담을 심화시킬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의 무분별(또는 과다)한 실시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 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을 목표로 다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악화 초래 우려 - 특히 지역개발분야 세출(지출)부문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 - 각종 공공서비스 공급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공약사업, 선심성 사업, 지역주민의 관료화로 사업효율성 저해 • 지역개발분야는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쟁구조를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들을 조정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방식의 장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사업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할 필요 •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지역개발사업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의 투자심사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추후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지방의 지출 책임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필요 • 중앙과 지역 간, 지역 간 재정거버넌스를 유지하여, 지역개발사업의 균형적 배분과 효율적 집행, 사후관리 등을 추진 • 지역개발정책을 포함한 지역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강화

출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5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원기반 확충

-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해 지방세 비중을 늘리고 새로운 세원 발굴과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할 필요
- 장기적으로 경제적 저성장 등에 대비하여 시간적인 관점에서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rainy day fund)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방안 고려

지역주도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하는 동시에 예산배분 기준을 객관화하여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

-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상향식(bottom up)으로 전환하여 지역은 단위사업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조정·승인 및 지원·협력하도록 개선하며, 공모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사용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포괄적인 지역개발 방향과 예산할당계획을 마련한 후 기초지자체와 광역도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지원

협력적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충 및 주민 참여 강화 도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조를 개편하여 (초)광역사업 및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중앙-지방-지방-지방 간 계획계약(지역발전투자협약) 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재정협력의 실효성 제고
-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개발사업 아이템 발굴과 협력적 정책형성, 성과공유 및 평가 등 환류시스템에 기반한 정책프로세스를 마련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업과 재정관리 간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및 사후관리제도 고도화

- 지역개발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와 투자심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 사업종료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후 운영에 대한 시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목표에 근거한 중앙부처와 시도의 사후관리에 대한 컨설팅 도입
- 지역개발사업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
- 재정력이 높은 지역은 이전 재원을 줄이고 지방세 확충을 통해 재정자율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

참고문헌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지역개발통합모니터링. <http://rdims.lh.or.kr/index.do>

통계청. 시군구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https://kosis.kr/search/search.do>

행정안전부. 202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하). 세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 이 브리프는 “정우성, 조정희. 2021. 지역개발사업분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것임.

• 정우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
(wsjung@krihs.re.kr, 044-960-0207)

• 조정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jhcho@krihs.re.kr, 044-960-0569)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

